

##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제 결

① 사 건	경북행심 2020-7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성 명	고승구	
	③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④ 피청구인	영주시장	⑤ 참가인	
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⑦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⑧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⑨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0. 3. 30.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20 - 71)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 고승구는 평소 공익과 사회적 후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2019. 9. 23. 17:28경 행정○급외 4인은 월요야간민원실 운영을 위한 근무에 따라 근무자들과 함께 먹을 음식(떡볶이, 초밥)을 배달어플로 주문하였고 배달음식 수령 후 조리기구 미포함 사실을 인지하고 업체에 조리기구를 요구하였으나 불가하여 직원 소유의 조리기구를 이용하여 취식 후 행정○급 ○○○은 위 내용(비조리 배달음식의 조리기구 미제공)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즉석떡볶이 배달 누구 잘못일까요?’란 제목으로 음식물 및 젓가락(상호노출) 촬영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였고, 국민신문고 및 익명 신고 제보를 통해 갑질 행사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방송, 신문, 인터넷, 영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논란이 되어 영주시가 공식사과문을 게재하게 된 일명 ‘영주시 떡볶이 사건’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5명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2020. 2. 4. ‘영주시 떡볶이 사건’ 관련 징계처분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소에도 공익과 사회적 후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영주시청 공무원 5인이 떡볶이 업체 점주에 대하여 비상식적인 이유로 자행한 갑질을 접하고, 영주시장의 공식 사과문을 보며 어떠한 진정성 있는 징계처분이 이뤄졌을지 궁금하여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유없이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 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8758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다. 피청구인은 어떠한 논리적, 합리적인 설명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

외한 징계처분결과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하였고, 비공개처분 하였다.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징계처분결과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관련자들의 성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자들이 특정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 없으며,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업무 처리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직자 업무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일부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징계처분결과를 공개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라함은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아울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매뉴얼)」에는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표사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징계처분내역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 결과는 비록 공무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내용이라도 해당 공무원의 인격, 명예, 사회적 평가 등 개인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정보이며, 정보공개로 인해 징계처분 당사자가 받게 될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영주시 떡볶이 사건 징계처분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

##### 가. 관계법령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기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및 익명신고 제보를 통해 갑질 행사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방송, 신문, 영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논란이 되어 영주시가 공식사과문을 게재하게 된 일명 ‘영주시 떡볶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징계처분 결과가 공개될 경우 징계대상자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이러한 사항들의 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침해되는 징계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의 침해라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